

아날로그 종료 8개월,  
디지털 전환평가 및 이후 과제

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  
한 석 현 (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)

# 1-1 디지털 전환 평가

-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만 초점이 맞춰진 디지털 전환 정책.
  - 아날로그 직접 수신가구 10% 정도만을 대상으로 한 소극적 전환 정책.
- 종료 당해인 2012년에도 갈팡질팡 한 디지털 전환 정책.
  - 지역별 순차 종료 전환, 채널 재배치 시기 조정, 일반 가구 기기 지원확대, 민영아파트 공시청 시설 개보수 본격화.

## 1-2 디지털 전환 평가

- 90%의 시청자에게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시청 환경 변화 없음.
  - 직접 수신환경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유료방송 가입구조의 고착화로 90% 이상의 시청자가 유료방송 시청.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만 931만 가구로 대다수 시청자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정책이 함께 진행되지 못함.

\*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 931만(63.1%)

\*디지털 케이블 가입자 551만(36.9%) - 2013년 4월 현재(미래부)

# 1-3 디지털 전환 평가

- 디지털 전환 정책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시청환경 변화와 편익 증대부분에 대한 평가 필요.
  - 고화질·고음질
    - : DTV를 보유한 직접수신 가구에만 해당 됨.  
유료방송 디지털 상품 가입자, 아날로그TV+디지털 컨버터 사용자를 디지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려움.
  - 다채널
    - : 방송사별 이견, 구체적 로드맵 없어 서비스 하지 못함.

## 1-4 디지털 전환 평가

### - 자막방송·해설방송

: DTV를 보유한 직접수신 가구에만 해당 됨.

아날로그TV+디지털 컨버터 사용자의 상당수가 고령자이며, 수상기 크기가 작고 화면 왜곡 발생, 리모컨 기능 숙지 어려움, 오작동시 주변 도움 필요 등으로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움.

### -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

: 현재 이에 대한 상세한 모니터 결과나 현황에 대한 결과가 없음. 편성변화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는지 모니터 필요.

# 1-5 디지털 전환 평가

## - 데이터 방송

: 실시간 시청자 참여, TV 전자상거래, 홈뱅킹, 전자우편 등을 할 수 있는 신개념 방송서비스로 디지털 전환의 주요한 시청자 편익 부분으로 얘기가 되었으나 현재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부분 없음.

-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시청환경 변화와 시청자 편익이 증대 된 부분은 거의 없고, 개별 시청자가 디지털TV 구입, 유료 방송의 디지털 상품 가입 등으로 일부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에 불과 함.

# 1-6 디지털 전환 평가

-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기존 아날로그 방송의 낮은 전파 수신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고화질을 구현하는 것만이 아님.
- 시청자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 
기존 아날로그 방송 정책 실패에 따라 당연시 되고 있는 방송 시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한 완화도 고려되어야 함.
  - 직접수신율 증대에 대한 목표치가 분명해야 함.

## 2-1 이후 과제

- 디지털 전환 정책이 종료되지 않고 관련 사항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송담당 부처가 방통위, 미래부로 이원화 됨.
- 방통위와 미래부가 클리어 콤팩, 8VSB 허용, DCS 허용, 지상파 의무재전송 범위 확대, 지상파 다채널 허용, 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방안 등 방송정책 관련 주요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음.



## 2-2 이후 과제

-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직접수신율 확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.
  -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청 설비 지원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는 뒤늦은 직접 수신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임. 이를 보다 완벽히 구축하고, 직접수신율을 목표치(2017년 30% 제안)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.
  - 이러한 목표치에 대한 달성 없이는 수신환경 구축, 개선, 관리, 감독 등에서 아날로그 때와 차별성 없음.
  - MMS 허용에 있어 직접수신율 달성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며, 이와 함께 재방송 비율, 채널의 공익성 등이 검토되어야 함.

## 2-3 이후 과제

- 절대 난시청 53만 가구에 대한 대책.
  - 난시청은 현재적 시점의 문제인데 이것을 또다시 위성 사용과 소출력 중계기 확대 설치를 연계해 정책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.
  - 위성방송과의 분쟁, 토지 수용 문제, 지역주민 반대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식 보다는 위성에서 절대 난시청 가구를 선별 직접 송신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.
  - 방송법, 전파법 난시청 기준 및 책임주체,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난시청에 대한 지원 방안 법제화 및 명문화 필요

## 2-4 이후 과제

- 2004년 이전 공동주택 분리 배선 강제 불가로 인한 관리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.
-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별도 조항 신설 등으로 공시청시설 복구와 관리,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및 주민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되어야 함.

### [※별도조항 신설]

- 제〇〇조【방송 서비스의 제공】관리주체는 입주자에게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에 대한 정보 및 수신방법에 대해 고지하고, 입주자가 무료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## 2-5 이후 과제

-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기존 유료방송 가입자에 대한 혜택 보장.
  - 유료방송 가입자 중 상당수가 지상파 방송 시청을 위해 유료방송에 가입하고 있음.
  -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유료방송 상품 개발 유도 필요.
  - DTV의 경우 직접수신 안테나와 유료방송 케이블 연결이 동시에 가능하며, 현재도 외부입력 설정 등으로 동시 시청이 가능함.

## 2-6 이후 과제

- 현재의 유료방송 상품은 지상파 채널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.
- 지상파는 안테나를 연결해 직접 수신으로 전환하고, 유료방송 채널들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의 별도 출시가 필요함.
- TV제조사 의 기술지원이 있을 경우 보다 매끄럽게 직접수신과 유료방송 수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 할 수 있으며, 시청자 선택권과 직접수신을 확대, 방송 시청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음.
-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이 적극적인 콘텐츠 대결구도로 갈수 있고, 지상파 재전송 분쟁에 따른 시청자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음.